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오 승 열*

◁ 목 차 ▷

I. 서론 : 생존전략으로서의 비공식 부문 경제	효과
II. 비공식부문 경제의 규모 및 기능	IV. 비공식부문 경제의 시장화 가능성
III. 비공식부문 경제의 장기적 파급	V. 결 론

I. 서론 : 생존전략으로서의 비공식부문 경제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계획경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배급은 평균적으로 규정량의 3분의 1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산업가동률 역시 정상수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대적인 물자부족에 직면하여 북한의 공식 물자배분 체계가 혼란에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빠지고 수송부문 병목현상이 악화됨에 따라, 산간벽지 주민 및 중소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식량 및 생필품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권층과 일반주민간 경제생활 수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체제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란 이미 불가능해졌으며, 북한은 단지 북한식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합영법 제정과 독립채산제 채택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변화를 시도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선포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경제회생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으며 경제는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근자에 공식 물자공급 체계가 거의 와해된 상황하에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경제정책 변화의 성과가 아니라 비공식부문 경제의 존재라는 점은 북한 방문자나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북한경제에 있어서 암거래와 밀무역, 그리고 당·군·정 등의 권력기구 및 관리계층의 특권을 이용한 비생산적 이득 추구행위, 지역이기주의적 경제행위 등 다양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존재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4년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과 1989년 ‘세계사회주의 청년학생축전’,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중 국경무역 등이 수반했던 개인 상행위와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는 북한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확산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경제는 공식 계획경제 부문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하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의 법체계하에서는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관측되었던 개인적 상거래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의 개인적 상행위가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의 ‘공식적 개인 상행위’라면, 최근 관측되고 있는 암거래 등의 경제활동은 물자부족 현상의 심화

에 따른 ‘불법적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하여 탈사회주의적 경향을 분쇄하려는 시도를 했던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북중국경무역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시장’을 개설하고, 식량 및 생필품 조달을 위한 주민들의 빈번한 여행과 농민시장 등을 통한 불법적 거래행위의 증가를 묵인하고 있다. 특히 1992년 10월에 조직되었던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비공식부문 경제가 더욱 확산되던 시기인 1993년말 조기 해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에 대한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또한 극심한 외화난으로 인해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원유와 곡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북한당국은 외화상점용 소비재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몰수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경제적 생존전략으로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영법 제정이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계획, 혹은 무역회사의 증설을 통한 무역촉진 정책이 다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함에 따라,¹⁾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체제유지에 필요한 주민의 경제적 욕구를 최소한도로 채워주기 위한 전략으로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은 나진-선봉 지역의 건설이나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도 아니며, 바로 비공식부문 경제의 묵인이라고 할 수 있다.

本文은 북한경제의 비공식부문 확산 추이와 관련하여, 이를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파악하고, 비공식부문 경제의 규모 및 기능, 북한 경제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 공식적인 시장화 가능성을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제한적 경제정책 변화의 결과 분석은 오승렬 외,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II. 비공식부문 경제의 규모 및 기능

1. 비공식부문 경제의 규모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²⁾ 제9조는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 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여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채뭇이 차려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일원화상품 공급체계에 따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별로 분배하여야 하며 도행정경제지도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분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물자공급체계는 국가 계획기관의 통일적 관리하에 놓여있으며, 이는 소비재는 물론 생산원자재 혹은 기타 생산요소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물자의 희소가치를 반영하는 가격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물자공급은 국가계획 달성을 위한 주문에 근거하여 생산·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자 부족현상 및 수송부문 병목현상의 악화에 따라 공식 물자공급체계의 자원배분 기능은 매우 제한적인 역할 밖에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군사부문과 핵심적 기간산업을 제외한 산업부문이나 당·군·정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관리계층 이외의 일반 주민을 위한 물자공급망은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경제의 침체정후가 보이기 시작했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지원이 감소했으며 동구사회주의권 시장을 상실한 1990년대에 들어 현저히 부각되었다.

비록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영역 및 규모에 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2) 1992.4.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 승인.

않으나, 탈북 귀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공식 물자공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비교적 최근의 귀순자들은 지역 및 계층 그리고 직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북한주민은 식량을 포함한 일상생활용품의 50~90%를 비공식부문에서의 물물교환 혹은 현금구입의 경로를 통해 얻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³⁾

일용품 협동조합 자재인수원 출신의 귀순자는 신의주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월임금이 70~80 북한원인데 비해 실제 생활비는 200~300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근무자의 50~60%가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고 자신은 외부에서 불법적 개인장사를 하여 생활비로 충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안중기계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북한이 공업관리 체계의 모범으로 선전하고 있는 대안중기계의 경우에도 송출되는 전압이 너무 낮은 점을 이용, 변압기를 제작하여 개당 150 북한원에 암거래하고 있다고 한다.⁴⁾ 나진지역에 근무 경험이 있는 귀순자는 자신이 어부들의 출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획량의 30% 정도를 취했으며, 이를 다시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달러화 또는 북한화폐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는 지역 혹은 산업부문별로 광범위하게 확산, 이미 일상생활화 되었으며, 경제난 악화에 따라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정부패 현상 역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부문 역시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농민들에 대한 곡물할당량이 연간 1인당 200kg에서 100kg수준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농민들

3) 본 연구에서 활용한 탈북 귀순자 면담자료는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와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출간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민족통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이 1996.5~7월에 걸쳐 1994~96년 동안의 귀순자 30명에 대해 실시한 개별 면담자료를 가리키며, 본문에서는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로 지칭한다. 면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4)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5)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의 근로의욕이 더욱 위축되고 이는 다시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⁶⁾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국영농장 혹은 협동농장 자체의 농업생산량 提高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농장단위의 농업생산량중 일부를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이를 비료 등 농업용 원자재와 교환에 사용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적 경향도 보이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일정 면적 이내로 허용되는 텃밭 등의 개인경작지 경작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담배농장원이었던 귀순자는 스스로 개인경작지 1,000평을 일구어 옥수수 600kg과 콩, 수수, 팥 등 양곡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농업부문의 상황은 비공식부문의 생산량 및 거래를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⁷⁾

한편 1980년대말 이래의 대외무역 분권화 정책에 따라 당군정 각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외화별이조직을 설립하고 외화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북·중국경을 왕래하는 친인척 방문자 및 개인상인 등이 많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공식부문 경제 규모 역시 확대되어 왔다. 중국측 관련 공무원의 평가에 따르면, 북·중간 비공식 무역규모(밀무역, 개인의 왕래에 따른 거래, 세관 축소보고 부분 포함)⁸⁾는 북한의 대중국 총수입 규모의 30~40%에 이르고 있다.⁹⁾ 이와 같은 비공식 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은 대부분 북한내의 비공식부문 경제에 의해 소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소매상품 유통액에 대한 한 평가에 따르면, 1993년도 북한의 공식 유통규모는 약 133억 북한원 수준이다.¹⁰⁾ 1993년 공식적인 북한의 대중국 수입규모가 약 6억 달러 수준이므로 비공식 수입규모는 대략 2억달

6) FAO/WFP, *Urgent World Program Report on Current Food Crisis in North Korea : Special Alert* (New York : 1996.5.13).

7)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8) 북·중간 교역규모는 탈세 목적으로 세관에 축소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9) 1995.8 필자에 의한 중국 심양 및 단둥에서의 현지조사 결과.

10) 홍성국, 「북한의 상업 유통」 (서울 : 공보처, 1996), p. 91.

러 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¹⁾ 2억 달러를 무역환율로 환산하면 약 4억 3천만 북한원이며, 일반적으로 북한 암시장 가격수준은 일반적으로 국정가격의 10~30배를 초과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평균 20배를 가정할 경우, 북·중간 비공식 무역에 따른 북한내 상품 유통규모는 대략 암시장가격 기준으로 80억 북한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유통규모와 비교해 볼 때, 이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비공식부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북한 화폐 부문의 혼란은 또 다른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와는 달리 주민 혹은 경제단위의 외화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암시장을 통한 거래에는 북한원화와 달러 및 중국 인민폐 등 외화가 통용됨은 물론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쌀도 일종의 화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물자부족 현상이 악화됨에 따라 암시장 등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에서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경제난으로 인해 실물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화폐남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¹²⁾ 북한원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원의 상대가치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는, 외화 및 쌀 등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싼 화폐(cheap money)가 기회비용이 비싼 화폐(dear money) 즉 북한원화를 구축하게 되므로¹³⁾ 북한원화의 가치는 더욱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계획부문의 물자가 비공식부문으로 유출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1986년부터 1994년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경제에 있어서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비중은 이 기

11)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서울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12) 북한은 1992.3.1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거하여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약 43% 인상했으며, 농업생산물의 국가 수매가격 역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13) 이는 변동환율하의 개방형 경제에서 화폐대체(currency substitution)가 가능할 경우의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라고 할 수 있다. Fisher, I.,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revised ed.) (New York : Augustus M. Kelley, 1963).

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1990년대 이후에는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신속하게 증가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경제 침체로 인한 공식배급망의 와해로 인한 공백을 비공식부문이 보완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⁴⁾

2. 비공식부문의 기능

이념적 편향성에 의한 비효율성,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계획 실행상의 경직성과 불확실성, 희소가격 부재로 인한 생산 비용에 대한 둔감성, 불균형 성장 정책에 따른 중공업부문의 물자 흡수효과 등에 의해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¹⁵⁾ 식량 및 에너지의 심각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경제의 물자부족 현상은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틀마저 위협하는 한계적 상황에 이르렀다.

14)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15)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물자부족 현상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외연적(外延的) 성장 정책으로 인해 생산단위는 생산비용 및 경영활동 결과의 손익에 대해 둔감하며, 단지 양적 생산목표 달성을 추구하게 된다. 특히 당국의 '연성예산제약(軟性豫算制約: soft budget constraint)'하에서 생산단위는 생산량에 비해 과도한 에너지 및 투입재를 사용하게 되며, 양적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많은 투입재를 비축하게 됨으로써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생산재부문 우선정책으로 인해 생산재부문은 기타 산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투입재를 흡수하게 되므로, 경제전반에 걸쳐 부족현상이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판매자시장이 형성되어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둘째,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목표의 설정과 강제적 계획추진 및 계획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체제로 인해 생산단위나 지방 행정단위는 계획 추진실적이나 수행능력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게 되며, 보고용 통계자료를 조작할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허구적 생산실적 및 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중앙계획은 실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셋째,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물자수급 계획(material balances)에 의한 자원배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계획기간중에 상황변화 및 부족현상에 따라 당초의 계획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여타부문의 결핍현상이 가중된다.

계획부문에 비해 비공식부문 경제는 경제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비생산적 이득 및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생필품 부족 현상을 어느정도 완화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경제개혁 요구를 잠재우고 있다. 즉 북한은 비공식부문 경제에 대해 극단적인 물자 부족현상이 수반하게 될 정치적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동조절기구(built-in-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공식부문 경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명령형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부족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공업위주로 조직되어 있는 계획부문의 생산단위가 흡수하던 물자를 국정가격보다 높은 회소가격이 존재하는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으로 유출시킴으로써 물자 부족 정도를 완화시킨다.

에너지와 주요 생산설비 부품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산업가동률은 30~4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계획부문의 생산지표 달성이 불가능해 지거나 계획지표 자체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일부 생산원자재의 경우 소요량 이상으로 비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존재가 묵인될 경우 생산단위는 이를 통해 과다보유한 물자를 필요한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암시장의 높은 가격에 따른 이윤추구를 위해 불법수단에 의해 유출된 물자는 구매자에 의해 보다 시급한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여타부문의 초과수요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암시장을 포함한 비공식부문에서는 수요를 반영한 시장가격(국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격)과 거래에 따른 이익이 형성되므로 계획부문에 비해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적절한 품질과 규격을 갖춘 물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물자 부족정도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¹⁶⁾

16) 판매자시장의 만연 및 획일화된 지시에 의한 양적 생산목표의 추구로 인해 생산재와 원자재는 필요한 품질 및 규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며, 적절한 공급 시기 및 장소를 맞

셋째, 계획부문 경제의 침체와 비공식부문 경제 확산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계획부문 근로자들은 뇌물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혹은 당국의 의도적인 묵인하에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일용품 생산 혹은 상거래 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며, 식량 혹은 원자재 조달 명목으로 타지방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므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생활용품 부족현상 혹은 지역간 물자공급 불균형 현상이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다.

넷째, 암시장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확산은 이윤추구를 위한 중국 등지로부터의 일용품 밀수입 및 반입을 조장함으로써 암시장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초과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¹⁷⁾

다섯째,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 경제의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의 희소가격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비효율적 용도에 사용되거나 사장되어버릴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됨으로써 자원 동원 및 용도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귀순자 면담자료에 의하면, 식량 및 생활용품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1, 2, 3, 4의 4단계로 표시할 경우, 면담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식량 및 생필품 조달의 어려움은 1992년의 2.9를 정점으로 하여 1993년 2.83, 1994년 2.72로 완만하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이나 생필품난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결과라기 보다는 이 기간 동안 북한당국의 묵인하에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공식배급망 이외의 경로를 통해 식량 및 생필품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면담결과는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이 물자 부족현상을 어느정도 완화하는 기

출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제전반에 걸친 자원 낭비현상과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 17) 비공식 경제 영역의 확대는 희소가격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부담 정도를 동시에 반영한 높은 가격과, 빠른 화폐유통속도, 외화를 포함한 다양한 교환수단의 존재 등을 통해 유효화폐총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국내경제의 상품 공급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밀수행위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비공식부문 경제의 장기적 파급효과

북한당국의 묵인하에 확대되어 온 비공식부문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식량 및 생활용품을 포함한 물자부족 현상의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계획경제 부문의 시장지향적 개혁 없이 비공식부문 경제가 장기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투자 및 물자배분 구조의 왜곡, 소득격차 확대, 통화팽창 등 심각한 거시경제상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견된다.

1. 투자 및 물자배분 구조의 왜곡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극심한 물자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확대는 계획경제의 경직성과 결함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식량 및 생활용품난을 어느정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공식부문의 긍정적 역할은 단지 일시적인 편익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시장기구 도입과 소유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은 주로 공식부문에서 유출되거나 밀수된 물자의 유통을 위한 교환행위(상행위)로 이루어지며, 생산 영역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한 편이다. 소유제도에 관한 법률적인 제약은 물론, 북한당국의 비공식부문 경제 묵인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과¹⁸⁾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부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비공식부문 경제의 영역이 개인 혹은 소규모 기업의 생산활동으로는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암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생산활동은 고작 조잡한 형태의 식료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18) 여기에서 본질적인 불확실성이란 개혁조치를 통해 비공식 부문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당국의 묵인정책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측면을 가리킨다.

북한이 산업불균형 및 물자난을 극복하고 장기적 균형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靜態的 경제 효율성 제고는 물론 각 산업분야에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動態的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공식부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계획부문의 물자가 지하경제로 유출되는 동시에 계획부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경제구조의 二重化를 심화시킴으로써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이중화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本稿에서는 계획경제부문과 비공식부문 경제 간에 존재하는 乖離現象을 가리킨다.

계획부문과 비공식부문 경제의 이중구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투자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침체와 계획부문 물자의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 계획부문의 생산활동은 더욱 저조하게 되며, 계획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국영기업과 수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장기성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소모적인 비공식부문에서의 상행위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유효 노동투입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시금 생산이 저조하게 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 부족현상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생산설비 감가상각률, 경제난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설비경신용 자본 확보의 어려움, 기확보 자금의 用途轉用과 企業流動資金의 消費基金化 등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북한이 계획경제 부문의 체제개혁을 통해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을 공식적인 시장기구로 정착시킴으로써 이중적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북한경제의 손실은 최소화될 수 있지만, 만약 체제개혁 없이 비공식부문의 확산이 지속된다면, 북한경제의 구조적 결함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경제성장 궤도로의 진입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2. 소득분배구조의 문제점

비공식부문 경제의 존재가 가시화되기 이전 시기에 있어서 북한노동자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賃金收入에 국한되었다. 또한 북한은 극단적인 ‘均等主義’이념으로 인해 업종별 혹은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전 산업에 걸쳐 임금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중공업위주의 산업정책은 소비재나 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일반 주민들은 저수준의 균등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확산 결과로 지역, 계층, 직업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구성이나 직업 성격상 비공식부문 경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은 공식배급망의 와해와 함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체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소득분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지역적 격차와 소득계층간의 격차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적 소득격차의 발생은 경작지 유무, 수송애로의 정도,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확산 정도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계층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비공식부문 경제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및 특권을 이용한 이득 확보의 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공식부문 경제활동 기회가 적은 북한 탄광노동자의 경우 임금과 공식배급망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으나, 귀순자중 무력부 산하의 ‘외화벌이꾼’의 경우 비공식 수입이 월평균 500~800달러에 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⁹⁾ 또한 식량 경작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함경남북도 지역 및 수송애로가 심각한 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비공식부문을 통한 식량 획득 역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산업가동률 저하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지역 주민의 경우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공식배급망을 통한 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공식가격의 수십배에 달하는 암시장 가격으로 생필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실질소득 감소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19) 민족통일연구원 귀순자 면담자료.

귀순자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담대상자 출신 직업을 노동자·농민·군관·해외생활경험자로 분류할 경우 식량난 및 생필품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는 1~4의 범위에서 각각 3.0·2.0·2.4·1.7과 3.2·3.0·2.4·1.8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일반 노동자가 가장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고, 식량의 경우 농민과 군관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생필품의 경우 노동자와 농민이 다같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軍은 생필품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受惠階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외생활유경험자는 保有外貨를 사용하여 생필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뿐더러, 이들은 대체로 특권층과 연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면담결과는 근자에 비공식부문 경제영역의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간의 실질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비공식부문 통화팽창의 문제점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통화팽창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 국정가격의 수십배에 달하는 암시장 가격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조달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쌀 1kg의 공식가격은 8전(북한원화)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암시장 가격은 1992년도의 15~20북한원에서 1995년의 30~40북한원으로 올랐으며, 국정가격이 한켄레에 1원 40전(북한원화)인 운동화는 1992년의 30~40북한원에서 1995년의 50~70북한원으로 올랐다.²⁰⁾ 특히 비공식부문 경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공식부문에서의 통화팽창 현상은 간접적인 통화남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북한은 심각한 비공식부문의 통화팽창에 따른 주민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1992년 3월 근로자 임금을 평균 43.4% 인상하고, 화폐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구화폐를 1:1로 교환하기도 했다.

20) 민족통일원의 귀순자 면담자료.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생산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므로 기업소로부터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당국은 경상 재정지출을 위해 통화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폐의 실질가치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에 따른 현금화폐의 유입은 비공식부문의 화폐과잉 현상을 악화시킴으로써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며, 불법수단을 통해 계획부문의 물자를 비공식부문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계획부문의 생산활동은 더욱 저조해진다.

한편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라 직위를 이용한 부패현상, 경제의 이중구조에 기인한 비생산적 便益追求行爲(rent-seeking activity) 등의 존재는 계획부문이 정확한 주민 소비수준 및 성향이나 생산설비 투자규모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도를 반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저해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소비자금 규모의 파악과 수요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돌발적인 거시경제적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에 나타난 생산설비 투자나 사회간접자본 확충규모는 실제 경제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므로 경제계획을 통해 북한 경제에 존재해 온 산업불균형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거나 장기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물자 부족현상의 완화라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要因에 대한 적합한 설명으로서는 新古典學派의 觀點과 構造的 解釋 및 'X-비효율성'(X-inefficiency)의 除去 등을 들 수 있다. 新古典學派의 경우 생산요소의 증가(자본 축적 및 노동력 증가)와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생산 잠재력 확대 및 생산성 제고를 주요 성장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구조적 해석에 의하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부문으로의 資源再配置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구조의 개선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상당부분의 경제성장은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X-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²¹⁾ 그러나 장기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그 어떤 요인의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 계획경제 비중 축소, 가격 자유화 및 국제경제와 국내경제의 연계, 소유권의 다양화를 통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오히려 효율적인 계획과 시장기제의 운영이 다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북한경제체제의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²⁾ 시장기구의 도입을 통한 북한경제의 개혁만이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병목현상 및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북한은 자원의 희소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시장가격의 신호를 근거로 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비로소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IV. 비공식부문 경제의 시장화 가능성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이 북한 북한경제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연계될 가능성과 경제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확산을 市場指向的 改革의 前兆로 해석할 수 있

21) 라이벤슈타인에 의하면 같은 생산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어떤 기업이 단위 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요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X-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Leibenstein, H., "Allocative Efficiency Versu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1966).

22) 합리적인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방향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는 논리적 근거로는 첫째, 비공식부문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둘째, 비록 북한주민들이 일단 희소가격에 근거한 비공식부문의 효율적 거래방식에 익숙해진 뒤에 이를 다시 계획경제의 경직된 틀로 환원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셋째, 북한의 계획부문 경제는 이미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졌으므로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결국 시장기구의 도입을 통해 비공식부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극단적인 물자부족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외부원조로 부족현상이 어느정도 완화되거나 제3차 7개년계획 이후의 정책적 조정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현재의 묵인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도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당국은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이 식량난과 생필품난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보고 묵인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정책노선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의 경직된 정치 및 경제체제로 인해 현존하는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 영역의 기능과 역할은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기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시장지향적 개혁의 전조로 파악할 수는 없다.

보기에는 상반되는 이와 같은 논리들이 각각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결국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적 측면과 기능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비용-편익적 판단이 북한체제 변화의 향방을 가름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교경제체제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1) 의사결정 구조 (2) 정보 유통구조 (3) 인센티브 구조 (4) 운용구조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³⁾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파악할 때 市場機構는

23) Neuberger, E. and Duffy, W.,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 A Decision-Making Approach* (Boston : Allyn and Bacon Publishing Co., 1976).

경제체제 운용구조의 하나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나머지 세가지 측면은 체제의 운용구조에 의해 성격지워지며, 이들 모두는 서로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장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경제체제는 의사결정 구조가 구체적 경제행위자(기업이나 개인)에게로 分權化되어야 하며, 시장가격을 통한 정보의 수평적 유통이 보장되어야 하고, 개별 경제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추구라는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공산품 시장이 순조롭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가격구조의 개혁을 통해 시장가격이 상품의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그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령적 계획 부문이 축소됨과 동시에 이윤이나 경영방침과 설립 또는 폐쇄 등에 대한 기업의 自主權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제한된 부존자원이나 기술수준, 그리고 부족한 투자재원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진기술 흡수나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한 資源配置 最適化를 위해서는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정보 및 인센티브 체계의 측면에서 연계시킴으로써 국제 비교우위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의 성격과 관련하여 판단하자면 효율적인 시장기구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다양한 소유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과 선택이 보장됨으로써 경제객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은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하에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는 여전히 공급자가 우세를 점하는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성격이 강하며,²⁴⁾ 생산보다는 주로 불법 유통행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장기구의 萌芽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4)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고질적인 물자 부족현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수성과 이에 의해 형성된 經濟客體들의 행위패턴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항상 강한 가격상승 압력하의 '판매자 시장'이 존재한다.

현재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가 효율적인 시장기구가 갖추어야 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비공식부문의 불법적 경제행위가 안정된 가격정보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으며, 의사결정권이 기업단위까지 분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활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환율 및 가격결정기제가 국정가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제경제와 국내경제의 연계에 의한 국제비교우위의 개발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체제개혁과 관련,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북한주민들에게 시장거래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 추진시 발생할 적응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시장기구와 유사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기능을 인식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비공식부문의 부족현상 완화 기능과 정치체제에 대한 제한적 파급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지향적 개혁의 정치적 비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개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재의 경제체제에 집착하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해 비공식부문의 자생적 확대 메카니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비공식부문 경제의 부정적인 장기 파급효과에 의해 북한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최악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경제의 운용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장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통제메카니즘의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자에 북한의 정책노선을 살펴보면, 아직 북한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층은 체제내에서의 계획메카니즘 조절을 통해 경제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에 있어서도 가격기구를 통한 국내외경제의 연계보다는 나진-선봉 지역 등 계획적인 開放區 건설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금년 봄부터 농업부문에서 ‘분조도급제’를 지역에 따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 과거와는 달리 ‘분조’가 보다 소규모화 되었으며, (2) 과거에는 도급기준을 초과하는 성

과가 현물 또는 상여금의 형식으로 분조구성원에 지급된 반면 신규 도급제는 도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분방식을 보다 자유롭게 규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분조도급제’는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급기준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고, 농산물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공식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²⁵⁾ 또한 ‘분조’의 규모가 7~8명 정도로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가족단위의 책임생산제도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이 짧은 시일내에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비공식부문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계획부문의 통제력 상실과 부정적 성장 과급효과의 가시화 등 값비싼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비로소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개혁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현재와 같이 개혁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과대평가 하는 한 시행착오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5) 분조도급제의 도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의 90%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근년 북한의 농업생산 실적이 자연재해로 인해 지극히 부진함을 근거로 생산자의 농산물 처분에 관한 재량이 신장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증의 필요로 한다. 첫째, 북한 농업생산량은 인센티브체계 및 농업용 원자재 공급부족 등 농업부문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근년에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수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분은 북한당국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의 90%인 도급기준은 결코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분조도급제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이전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도급기준이나 제도 운영방안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안정한 정책방안이 인센티브체계의 결함을 해소할 수는 없다. 분조도급제의 자세한 내용은 「조선신보」, 1996.8.14 참조할 것.

V. 결 론

근자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는 북한체제의 정치적 붕괴를 초래할 주민의 사회일탈 현상으로 단순히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체제의 강력한 정치적·이념적 사회통제력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당국의 묵인없는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의 묵인을 전제로 할 때, 나진-선봉 건설 계획을 포함한 제한적인 정책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활용은 실질적인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本文은 북한경제의 비공식부문 확산 추이와 관련하여, 이를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파악하고, 비공식부문 경제의 규모 및 기능, 북한 경제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 공식적인 시장화 가능성을 분석·평가하였다.

북한경제에 있어서 개인적 상거래 행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생존을 위한 북한주민의 자구적 노력과 당국의 묵인으로 인해 비공식부문 경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선 다음부터이다. 극심한 물자부족 현상으로 인해 공식배급망을 통해 배급되는 생활용품이 규정량의 10~2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하에서 대다수 북한주민은 비공식부문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부문에 비해 비공식부문 경제는 경제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비생산적 이득의 존재 및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생필품 부족 현상을 어느정도 완화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경제개혁 요구를 잠재우고 있다. 즉 북한은 비공식부문 경제에 대해 극단적인 물자 부족현상이 수반하게 될 정치적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동조절기구(built-in-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비공식부문의 확산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계획부문 물자의 불법유출, 암시장의 수급 조절기능, 주민이동 및 밀수입 증가, 높은 암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동원 효과 등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인 식량 및 생필품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체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비공식부문의 확산은 투자 및 물자배분 구조의 왜곡, 지역 및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 확대, 비공식부문 통화팽창과 통화남발의 악순환 등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부작용은 북한경제의 성장궤도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자에 북한경제의 비공식부문 확산 추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이를 북한당국의 사회통제력 약화에 의한 체제붕괴 조짐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의 전조로 해석하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본문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와 같은 견해들은 다같이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 비공식부문 경제는 체제생존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붕괴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편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기구의 정착으로 귀결되기에 도 엄연한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공식부문 경제는 단기적으로 공식배급망 와해로 인한 공백을 메꾼다는 측면에서 생존전략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으나, 북한이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